

原電을 前提로 節約政策을

Jack A. Cunningham <英國 勞動黨 下院議員>

영국의 원자력발전 상황은 전기사업의 민영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신설 원자력발전 회사 뉴클리어·일렉트릭에 의한 사이즈웰B에 버금가는 PWR 건설이 중지된 점에서도 분명해졌듯이 영국의 원자력발전계획은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석탄업계도 똑같은 국면에 빠져있다.

영국 노동당은 가장 좋고 빠를 뿐 아니라 가장 경제효율이 좋아 환경상의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의 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균형잡힌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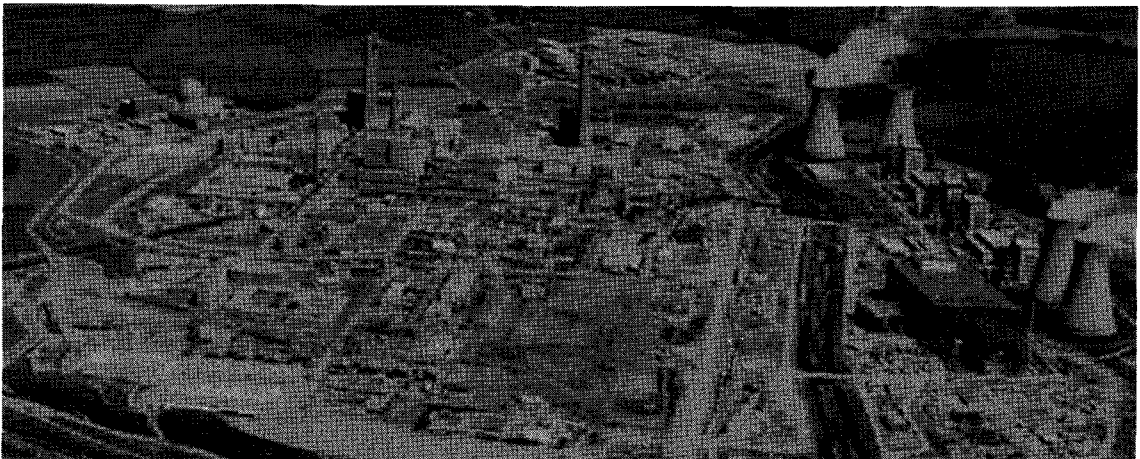
화석연료가 앞으로 수십년간 주류라는 인식은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장기에 걸친 전략자원으로서 원자력을 제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수송, 연소·에너지이용

의 개선을 위해 연구노력을 지원해 가는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또 대체에너지자원의 개발에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 환경상 수용하기 쉬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조사를 정부가 지원해야만 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 등의 경험도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3세계는 현재 전세계 에너지의 15%를 사용하고 있으나, 선진공업국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해 버리면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는 화석연료 시장에서 배제되어 버릴 것이다. 즉, 균형잡힌 세계의 개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제개발을 지원해 가는데 원자력발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영국 노동당은 BNFL의 재처리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변함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폐기물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계한 지하의 채굴시설에 유리固化시킨 폐기물에 감시를 붙여 회수 가능한 형태로 저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굴이 두군데서 시작되고 있는데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미정이다.

원자력발전은 이산화탄소의 방출 저감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다고 결론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적인 견해인데, 원자력발전은 공업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三分의 一을 節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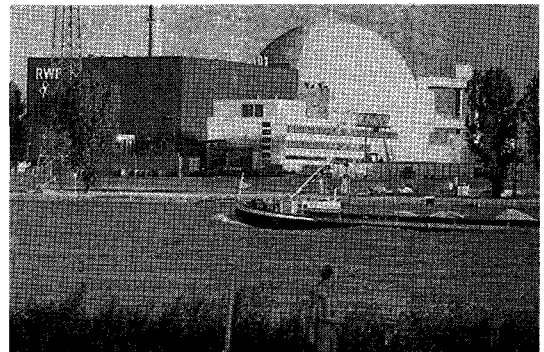
Wolf-Michael Catenhusen <西獨 社會民主黨 聯邦議會 議員>

서독의 SPD(사회민주당)는 ① 고속로·고온가스로의 개발 중지, ② 재처리전략의 폐기, ③ 신규 경수로의 건설·운전 불허가, ④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검사 실시, ⑤ 10년내에 기존 경수로를 운전정지할 것을 목표로 한 「원자력철폐법」의 통과, ⑥ 지금까지 원자력에 투자해 온 것과 동액 정도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으로 돌린다 등을 1986년에 결의했는데,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아직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왜 원자력을 포기하는지의 이유로서는 ①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에 걸친 영향은 이전에 생각되고 있던 것보다 크다, ② 원자력 이용은 경제에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한다, ③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은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④ 플루토늄이용은 감시관리조치를 필요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민주구조에 위협을 초래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원자력을 포기한 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기의 절약이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함으로써 이에 의해 원전에 의한 전기의 1/3이 2010년까지 대체된다. 그리고 복합발전과 열발전으로 1/3을, 나머지 1/3은 화석연료를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이용하는 것으로 조달한다. 이런 것에 의해 유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로 추진되면 발전코스



트는 연간 5~6% 상승하여 에너지집약산업에서 3만명 정도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고조를 보이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SPD는 원자력은 발전부분에서만 화석연료의 대체일뿐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SPD의 추진정책은 ① 에너지·전기의 절약 장려를 골자로 한 새로운 에너지섹터법과 전기요금체계의 창설, ②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세의 증세 등인데 이 목적은 1인당 절대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있다.

SPD는 또 구주의 범위내에서 태양-수소섹터의 개발·도입을 목표로 한 전략의 작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 프랑스의 저렴한 전력의 수출은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